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대선 정국 강타

### 민주 "국기문란...하나회 같아" 윤 "권언유착 공작" 법적 대응 국힘 대선주자들 "진실 밝혀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압박하며 국면전환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독과할 수 없는 현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교할 만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도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민주개혁정당이 공동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지도부는 전면전 돌입에는 신중한 표정이다. 자칫 선부르게 대응했다가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후속보도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관심사가 될 사안이니만큼 요리로 잘해야 한다. 서두르면 음식이 설익는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면대응 기조다. 이번 의혹을 정부·여당의 자작극이자 '권언유착 공작'으로 규정, 캠프 차원에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있으면 (증거를) 대라"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엄호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에서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당무감사를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경쟁 주자들은 '진실규명'에 방점을 찍으며 견제를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진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

다"고 촉구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고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전 지지율 역전을 기대하는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60대 이상과 TK(대구·경북)만 평정되면 경선은 끝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8인 협의체' 외부 전문가 민주, 김필성·이봉수 거명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민주당류 외부 전문가 2명을 다음 주 초 선정하기로 했다.

5일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8인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최고위원·김종민 의원,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류 전문가 2인 선정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6일)쯤, 일찍 서둘러서 하겠다. 야당도 빨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쪽은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속도감 있게 협의체가 꾸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검토하는 전문가로는 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필성 변호사와 한겨레 기자 출신인 이봉수 세명대 교수가 거명되고 있다. 한 수석부대표는 두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튼 여러 명을 고려 중"이라고 고만 담했고, 윤 원내대표 역시 같은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라고 말했다.

야당은 각 2명의 외부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언론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영입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민주와 대선 연대?

### "후보선출 여부 추석까지 결정"

범여권의 열린민주당이 20대 대선에 후보를 내놓을지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강성 친문 성향의 열린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당내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후보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후보 선출보다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에서는 열린민주당의 특성상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성 당원들이 많은 열린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연대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비 보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10~15%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 대 머무는 열린민주당으로선 자칫 수십억원대 선거비용만 날릴 수 있는 셈이다. 당 관계자는 "늦어도 추석 연휴까지는 후보선출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자"

### 문대통령-의장단 간담회서 "우리정부 말년 없어...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상임위원들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오찬 간담회를 하며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가짜뉴스 및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독일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짜뉴스를 동원해 유대인 다 매도 해놓고 학살을 진행했다. 그만큼 가짜뉴스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탄핵 괴담 얼마나 가짜뉴스들이 세상을 흔들었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외국 정상들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는 말년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은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정신이 협치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어물쩍 넘길 일 아냐" "억지비판 그만"

### 여야 이준석·박지범 위반 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몰랐다고 어물쩍 넘겨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후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게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유학 시절이라 몰랐다면 다인가. 3차례 국회의원에 출마한 제1야당 대표가 직계가족 부동산 문제를 점검하려

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해명으로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 그걸 두고 이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은 잠 잘못된 처사"라며 "그만들 하라.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의 티끌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도 SNS에 "이마저도 내로남불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고... 별 설득력도 없는 가혹한 '억까' (억지 비판)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p>1) 40평(전용) <b>2억3천</b>(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b>4억3천</b>(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 <b>5억8천</b>(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p><b>광주에서 20분(6M도로접)</b></p> <p><b>장성댐 (호) 2분,</b> <b>장성 IC. 5분</b></p> <p><b>총 1760평</b>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b>010-6670-9800</b></p>